

조기유학 리포트

교육 및 조기유학 여론연구

대표집필 임천순
집필진 서소정
이병민
정일준
정한울

조기유학리포트 :

교육 및 조기유학 여론조사 보고서

저자 : 임천순 외

초판 : 2008. 2. 28

수정 : 2009. 5. 20

발행 :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편집 : 신영환

Copyright©2008 by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조기유학리포트

교육 및 조기유학 여론조사 보고서

대표집필 임천순
집필진 서소정
이병민
정일준
정한울

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_7

연구방법 _9

 조사의 개요 _9

 문항구성 _10

 연구진 및 패널의 구성 _11

선행연구 개괄 _12

 조기유학의 논의 배경 _12

 조기유학의 확산 실태와 문제 진단 _14

 조기유학을 보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_20

국민여론으로 본 학벌주의와 공교육 위기 _22

 공교육 평가를 좌우하는 요인 _23

 공교육 실패의 원인 _30

 공교육 실패가 가져온 사회인식의 변화 _38

교육 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 조기유학 _43

 조기유학의 실태 _44

 왜 조기유학을 선택하나? _49

논의 요약 및 제언 _61

참고문헌 _64

그림

- [그림1] 조기유학생 출국 현황(2001-2007년: 명) _15
- [그림2] 공교육 만족도(%) _23
- [그림3] 학생 자녀 유무와 공교육 만족도(%) _27
- [그림4] 자녀의 진학 희망대학(%) _30
- [그림5] 자녀의 학교단계별 공교육 평가(%) _32
- [그림6] 공교육 만족도와 고교평준화정책 태도(%) _40
- [그림7] 한국 사회 계층이동기회 평가(%) _41
- [그림8] 공교육 만족도와 사회 계층이동기회 평가(%) _42
- [그림9]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및 조기유학 의사(%) _45
- [그림10] 학부모집단의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변화(%) _46
- [그림11] 조기유학의 목적(%) _50
- [그림12] 영어교육 공급확대 방안(%) _51
- [그림13] 조기유학 태도/의향별 영어교육 공급방안(%) _52
- [그림14] 가장 선호하는 조기유학 국가(%) _54
- [그림15] 조기유학 가장 많이 국가(2005-2006년: %) _54
- [그림16] 영어실력이 취업이나 승진에 미치는 영향(%) _56
- [그림17] 자녀 진학 희망대학별 조기유학 의향(%) _57
- [그림18] 국내 명문대 진학 가능 시 조기유학 의향(%) _58
- [그림19] 조기유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_59

표

- [표1]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공교육 만족도(%) _26
- [표2] 자녀 학교진학 단계별 공교육 만족도(%) _28
- [표3] 자녀 학교진학 단계별 사교육 목적(%) _29
- [표4] 자녀 희망 진학대학과 공교육 만족도(%) _31
- [표5] 전국대학 및 항목별 상위 10개대 취업률(%) _34
- [표6]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녀 희망 진학대학(%) _37
- [표7] 사회경제적 변수와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_47
- [표8]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조기유학 의향(%) _48
- [표9] 자녀학력 기대와 영어교육 공급방안(%) _53

서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조기유학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요체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었던 교육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교육환경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제 그리고 교육당국에 의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익숙해 있다. 우리의 교육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운용체계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은 통제와 규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교육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화, 그리고 최근에 확산일로에 있는 해외로의 교육이동(learning mobility) 현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Ihm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단일한 원칙과 경직된 운영방식이나 행정체계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잡적이고 분화되고 있다. 대학진학의 경쟁도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원화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강한 열의는 최근 세계화·국제화라는 흐름에 편승하면서 해외유학 열풍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조기유학 열풍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교육병 또는 학벌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중시 사고와 학벌주의의 근간에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성공이 바로 한 가정의 계층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조기유학으로 출국한 학생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여기에 조기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미성년자의 해외 장기체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교육 엑소티스’ 현상은 바로 한국교육이 교육적 수요와 요구에 제

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획일적인 통제의 틀과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문 정책의 추진전략과 목표는 새로운 각도와 접근방법으로 그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한국교육은 교육 수요의 다양화에 적극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은 지난 5년 동안 국회개혁, 정치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의 거버넌스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 실질적인 정책적, 학문적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유학’ 문제를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간 비영리연구단체로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EAI는 조기유학을 포함한 교육현안에 관하여 기존의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기유학을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는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mega trend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소비 주체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행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조기유학 열풍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EAI 국가인적자원패널팀에서는 총 12회의 심층토론과 두 차례의 조기유학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전화여론조사를 통한 실증자료의 수집 및 통계 분석을 병행하였다. 국민여론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의 개요 : 교육 및 조기유학에 관한 여론조사

본 전화여론조사는 EAI 국가인적자원패널 여론조사분석팀과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전국 7대 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자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는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방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2007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8월 1일 3일간 총 1,008명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이다.

조사기획 : EAI 국가인적자원패널 · 중앙일보사
조사일시 : 2007년 7월 25~26일, 8월1일 3일간
조사방법 : 전화조사
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표 본 : 1,008명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 $\pm 3.1\%$
조사기관 : 중앙일보 여론조사 실사팀

문항구성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8개의 영역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영역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의 문항 또는 문항군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교육 만족도 1문항, 자녀의 학력 기대수준 1문항, 사교육 및 사교육비 부담 1문항, 조기유학 및 영어교육에 대한 의견 9문항, 사회현안에 대한 5문항,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문항군 10개로 구성되었다.

- 공교육 만족도
- 자녀의 희망 대학 진로
- 사교육 이유
-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 조기유학 이유
- 여건 충족 시 조기유학 보낼 의향
- 명문대 진학 가능 시 조기유학 선택 여부
- 조기유학 희망 국가
- 조기유학의 취업 영향
- 정부의 바람직한 조기유학정책
- 영어실력이 승진/취업에 미치는 영향
- 영어교육 공급방향
- 정치(이념)적 성향
-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태도
- 한국 사회계층이동 기회에 대한 평가
- 대선 후보 선택 시 교육정책 고려정도
- 성별
- 연령
- 월평균 가계소득
- 교육수준
- 직업
- 거주지역

- 주택소유여부
- 취학연령 자녀 유무
- 취학연령 자녀수
- 취학학교 단계

연구진 및 패널의 구성

EAI는 조기유학 문제가 단순한 교육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가교육인적자원패널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교육문제는 교육 현장의 문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밀접히 연관될 때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본 연구는 교육문제 자체보다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아동가족, 사회학, 영어교육,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여론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문제 진단 및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AI 여론분석센터의 연구원들은 연구지원을 담당하였다.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인적자원패널

위원장 임친순(세종대 교육학과)

위 원 서소정(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이내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 정일준(고려대 사회학과),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하연섭(연세대 행정학과)

지원팀 곽소희(EAI), 송문희(EAI), 이상협(EAI)

선행연구 개괄

조기유학의 논의 배경 : 교육의 위기와 조기유학

조기유학에 대한 법적, 학술적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기유학은 “비교적 이른 시기 즉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조삼섭 외 2006).¹⁾ 조기유학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및 진학과정에서 영어능력이 강조되면서 영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조기유학 문제가 교육문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조기유학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기존의 언론보도나 정책 연구들은 대체로 조기유학이 확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벌주의의 만연과 공교육 실패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즉 학벌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가져왔고 심지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어린 유아 및 청소년들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로 내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외해, 외화유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론까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벌주의와 공교육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 조기유학의 문제를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문제해결의 핵심과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진단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크게 보면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공교육의 인성, 전인교육의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

1) 조기유학은 사유별로 해외출국 학생 중 교육장 등의 유학인정을 받은 인정유학, 중학 생이상의 자비유학, 부모의 해외 파견동행, 해외이주 등으로 구분된다(김홍원 외 2005).

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²⁾ 전자는 공교육의 위기가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이 경쟁위주로 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는 진단(강준만 1996; 김동훈 2002; 2006;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회 2004)이며 후자는 평준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비경쟁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박세일 외 2002; 조전혁 2007). 문제는 조기유학 및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나름의 논리에 기초하여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적인 정책 대안보다는 원론적이거나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실패와 조기유학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현실의 변화에 주목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팀의 견해이다. 다시 말해 특정의 이론적 도그마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진단할 것인가, 교육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공교육 위기를 진단할 것인가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이념논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교육의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요가 무엇이고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교육 논쟁은 탁상공론으로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교육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학벌주의/공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기유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조기유학의 사회적 폐해와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계기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경험적인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2) 자율적 경쟁강화론의 논리는 조전혁(데일리안, “비효율과 불의 교육을 떨쳐내야”, 2007/09/17), 중앙일보사설(“차기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세울 사람이어야”, 2007/04/7), 조선일보(“3불은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 2007/03/23) 평준화와 국가규제를 통한 정상화론은 강정채(“명문대여 정말 3불 탓인가”, 한겨레신문, 2007/4/20), 한겨레신문 사설(“왜곡과 거짓위에서 판치는 3불페지론”, 2007/03/23), 조기숙(“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프레시안, 2007/03/22) 등을 참조할 것.

연구는 전국 7대 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기유학 및 한국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논의 및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기유학의 확산 실태와 문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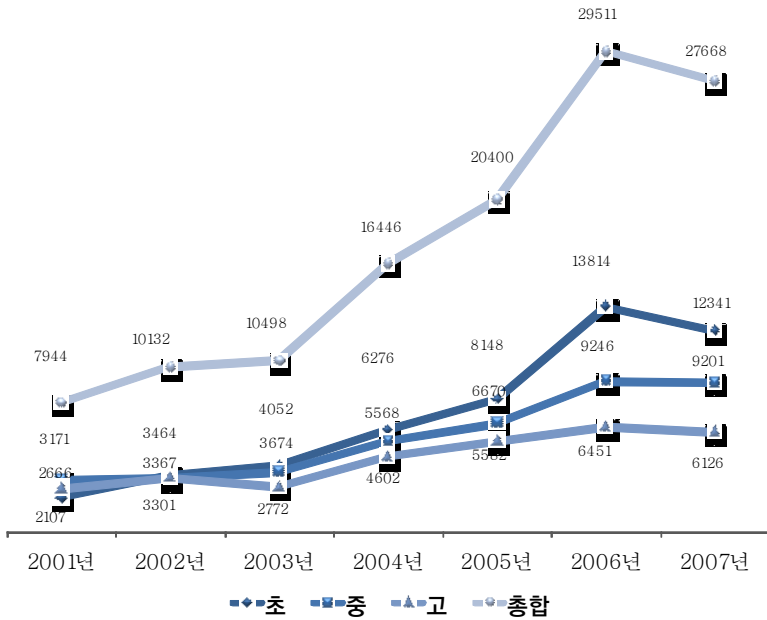
조기유학의 실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이 2006년 한 해 동안 3만 명(29,511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2008년 발표된 2007년도 출국 현황을 보면(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해외 조기유학을 위해 출국한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해외 조기유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이주 혹은 부모의 해외 파견 시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조기유학생은 2001년 7,944명에서, 2005년 20,400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27,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적인 조기유학생의 급증 추세와 함께 유학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이 크게 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조기유학을 떠난 초등학생 수는 2,107명으로 중고등학교의 조기유학생 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8,148명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조기유학자 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2007년에는 12,341명의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간 것이다.

3)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년 2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조기 해외 유학생 출국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림1] 조기유학생 출국 현황 2001-2007년 (명)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2008)을 도표화

이러한 조기유학의 증가추세는 조기유학을 바라보는 시각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사실 조기유학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로 자녀가 국내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위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상류층이 선택하는 일종의 ‘학벌 만들기’의 일환이자 영어 광풍(狂風)의 산물로만 이해했던 경향이 있다(“이민열풍에 이어 조기유학도 광풍” 한국일보 2003/10/21).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조기유학이 ‘불리한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학력 획득 및 진학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 보다 종합

적인 진단이 나오고 있다.

조기유학 확산 : 흡입요인과 배출요인

최근 조기유학의 폐해 뿐 아니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조기유학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유학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개개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학 대상국이 수요자를 유인하는 흡인요인(pull factor)과 이들을 국내로부터 떠나게 하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흡인요인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능력 배양의 필요성, 선진화된 교육체제로의 편입, 해외유학과 출신에 대한 사회적 우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기유학 흡인요인은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풍토 역시 외국어 구사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으로는 외국어 능력을 획득하기 어렵다(이병민 2003). 따라서 일찍부터 해외에 나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외국어 구사 능력 하나만은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들이 많다. 실제로 조기유학을 경험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영어 및 외국어 실력향상이 조기유학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김홍원 외 2005).

배출요인으로는 한국사회와 교육체제가 갖는 취약성과 교육소비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극심한 입시경쟁과 학벌중심 사회의 폐해 등을 들 수 있다(윤혜준 2005). 다양한 배출요인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력주의와 공교육의 실패문제를 제기한다(김홍원 외 2005; 조삼섭 외 2006). 학력과 학벌이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부모 세대들은 학력을 다른 교육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자녀의 학력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강지연 2002).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일단 목표한 학력, 학벌을 취득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면 그동안 지불한 막대한 교육적 지원과 투자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된다고 믿고 있다. 자녀의 학력은 부모들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므로, 국내에서의 경쟁이 불리하다고 판단 되면 과도한 경제적 비용이나 가족 이산을 불사하고서라도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조명덕 2002).

또한 기존 연구들은 공교육의 실패를 학력 및 학벌사회에서 교육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기유학을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공교육 실패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교육열과 학력 경쟁 하에서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입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신에 의해 교육 소비자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이나 대체교육을 우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경근 2004; 김수매리 2006). 즉 공교육의 위기는 공교육이 입시교육 경쟁에서 사교육에 주도권을 내줌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고 ‘교실붕괴 혹은 교실공동화’ 현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홍원 외 2005; 우천식 2004; 조명덕 2002).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왔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해외로 나가서라도 경쟁력(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유학 확산의 사회적 영향 : 명과 암

조기유학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정 및 개인적 수준에서 본다면,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 문제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의 현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조기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즉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비동거 가족이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들을 간과할 수 없다.

안병철(1997)은 ‘교육이산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바 있으며 조명덕(2002)의 연구 역시 부부관계의 변화 및 가족해체, 부모 정체성 상실,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두어 조기유학으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조기유학으로 인해 부부 간의 별거

및 의사소통 단절, 외도, 이혼, 가정해체 등의 가정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명덕(2000)의 연구도 부부관계의 변화 및 가족해체, 부모정체성 상실, 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유학으로 인한 비동거 가족의 가족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최양숙(2005)의 연구 역시 기러기 가족과 같은 장기간의 비동거에서 오는 가족해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양숙은 기러기 가족의 문제로 가족이 자녀를 위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정환경을 희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가정의 약화로 이어져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⁴⁾

또한 조기유학으로 인한 조기유학생의 적응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은 조기유학의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유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부적응으로 인해 탈선하거나 학업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하였다(김홍원 2005). 어린 시기에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은 외국학교에서 부적응, 마약, 술, 성관계, 한국어 미습득 등의 부적응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귀국 후에도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강지연 2002; 엄명용 2002).

한편 최근에는 조기유학 열풍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유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오는 과정에서 중하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조삼섭 2006; Ihm et al. 2007).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기유학생들이 대학까지 외국에서 진학할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해외에 정착할 경우 결과적으로 인적자원의 누수를 가

4)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덧붙여 부부가 별거하는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모-자녀 동일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낯선 생활을 해야 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아내는 자녀와 함께 해외로 나가고, 남편은 국내에 남아 경제적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부부가 별거하여 비동거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보다 자녀가 우선시되며 자녀의 일류 대학 진학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저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강남권) 학부모들의 교육 의식의 특징 및 조기유학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고 있으며, 조기유학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본 및 사회문화적 자본이 자녀 세대에서 재생산되는 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해 지적한다.

조기유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국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거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로만 치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기유학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조기유학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도 동시에 왜 많은 교육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조기유학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지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사실 조기유학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국가적으로 볼 때 조기유학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조기유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기유학은 우수 인재에게 다양한 해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에 외국의 문물을 익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어 구사능력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외국에서의 생활과 국외 대학 진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여 국제적 문화 교류 및 감각을 익힌 국제적 인재로 양성한다면, 국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즉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조기유학 수요의 증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동시에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교육투자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매리 2006).

한편 기러기 가족의 가족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엄명용(2002)의 연구에서는 기러기 아빠들이 분거 이후 아내와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성숙(2006)의 연구에서도 기러기 아빠들이 부부관계를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기러기 아빠들을 심층 면접한 연구(김양희·장운정 2004)는 기러기 아빠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지적한다. 엄명용(2002)은 이미 해체 위기 단계에 진입한 가족이 부부 간 또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은폐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피로서 자녀교육을 명분으로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⁵⁾

조기유학을 보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본 연구팀은 현재의 조기유학의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도그마나 특정의 입장보다 경험적 차원에서 사회변화와 교육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화나 지식정보화와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는 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정보,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수요 및 인력충원 경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Acemoglu 1999; Burtless 2007; Kayser 2007; Iverson and Cusack 2000). 현재 진행형인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의 이론들과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 소통능력과 교류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중요해지고 기술지식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재편은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숙련된 고급기술 인력만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Burtless 2007).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영어능력 및 국제적 경험이 중시되고 특수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국내 대학 진학 자체가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졸 출신의 인력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 간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이라는 점은 분

5) 또한 여성의 경우 어머니의 입장으로 보면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과중한 심적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기러기 가족이 고부갈등 등의 가정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탈출구가 될 수 있으며, 남편 수발을 하지 않고 식구가 단출하므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가정문제로부터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양숙, 2005). 이러한 경우 오히려 가족 비동거가 가족 갈등이나 해체를 피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명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좋은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극심한 취업경쟁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국내 명문대 진학=사회적 성공’이라는 공식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입을 위한 경쟁이 심각해지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해지는 현실은 현재 조기유학을 포함하여 교육문제 전반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인식태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이론적 도그마나 당위론은 교육 소비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기 힘들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교육소비자들의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나가는 작업을 통해 조기유학의 확산 배경을 설명하고 조기유학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들의 교육수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기유학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선행 작업으로서 공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국민여론을 통해 공교육 실패의 의미를 정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공교육 문제는 그 자체로도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 연구주제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조기유학이 새로운 교육선택으로 떠오르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교육수요가 입시대비 차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입의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와 연관된 초, 중, 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사회 진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학교육 영역도 공교육 평가의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조기유학이라는 새로운 선택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실망 요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 소비자들이 왜 조기유학이라는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왜 강해지고 있는지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계속 강조한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결과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앞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조기유학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셋째, 결론에서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정치, 사회적 함의를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한국 교육문제 및 조기유학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 할 이론적 과제들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팀의 조기유학 문제 및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들과 함께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거나 새롭게 시도해야 할 연구과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여론으로 본 학벌주의와 공교육 위기

본 연구는 교육 전반의 문제와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교육 소비자들의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객관적으로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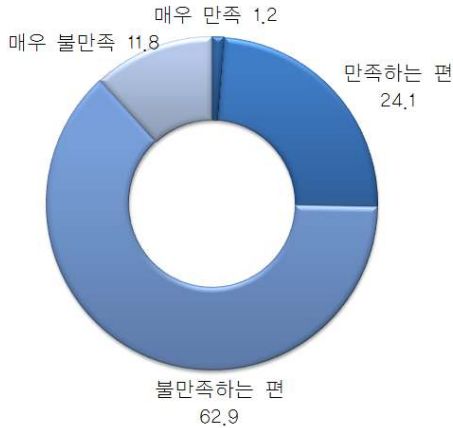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기유학의 핵심적인 배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학벌주의 및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벌주의와 공교육 위기 문제는 한국 교육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 자체로 핵심 연구주제이지만, 동시에 조기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선택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우선, 국민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력주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교육 위기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 여론을 누가 주도하는지, 왜 불신이 생기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교육 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살펴본다. 여기서 본 연구는 다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위기를 입시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대학 이전 단계뿐 아니라 대학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벌 서열이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입시 및 사회진입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공교육 평가를 좌우하는 요인

[그림2]에서 본 전화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총 1008명 중 응답자의 74.7%(매우 불만족 11.8%, 불만족 하는 편 62.9%)가 현재 공교육 체제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25.3%만이 만족한다(매우 만족 1.2%, 만족하는 편 23.2%)고 보고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지만 전체 국민의 일곱 명은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2] 공교육 만족도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85)

그러나 공교육 불신이 확산된 문제의 심각성 못지않게 누가 왜 공교육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교육 위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공교육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 즉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social economic

status: SES)은 개인의 사회이슈에 대한 태도와 선호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Campbell et al. 1960; Erikson & Tedin 2005). 공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집단이 공유하는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등 교육비 지불능력이나 부모의 교육 정도, 특정 세대의 문화적 트렌드 등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및 교육 수요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직접적으로는 현재의 공교육 제도와 그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학생)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특히 이들이 대학입시에 근접해 있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교육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강한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 제도에 편입되어 있는 자녀가 있고, 대학입시를 앞둔 고학년 자녀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공교육 관련 이슈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이슈에 개입involved되어 있을수록 이슈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보다 강한 태도attitude intensity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Krosnik 1988).

셋째, 현재의 교육제도 평가에 자녀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expectation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학력과 학벌을 계층이동이자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의 수단으로 보는 학력주의가 공교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 학력에 대한 즉 기대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클 수 있고 이러한 불신이 사교육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된다(강지연 2002; 조명덕 2002).

공교육 불신여론, 누가 주도하는가?

본 조사에서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계층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그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표1] 참조).

우선, 개인의 경제적 지위 혹은 소속 계층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들 즉, 소득이나 교육수준은 공교육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소득별로 보면 월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69.8%, 200~400만원 수준에서는 73.9%, 400~600만원 수준에서는 79.6%,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77.3%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의 응답자보다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간 이상 소득층에 속한 개인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기는 힘들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집단 간 인식 차이는 더욱 의미를 잃는다. 중졸 이하, 고졸층, 대재 이상 층에서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4.2%에서 74.5%사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성(28.7%)이 여성(21.9%)에 비해 공교육에 만족하는 비율⁷⁾이 높았다. 반면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여성(78.1%)이 남성(71.3%)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육아 및 자녀 교육 문제의 책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공교육 문제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30대(80.9%), 40대(81.0%), 50대 이상(76.8%)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62.8%에 그쳐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대와 달리 30대 이상 세대는 대체로 자녀가 취학 연령에 들어선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체감하는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 보면 주부계층(82.3%), 자영업(78.9%), 화이트칼라계층(72.9%), 블루칼라층(69.4%), 학생(68.1%) 순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주부층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80%를 상회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불만도가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교육을 보다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일수록 공교육에 대한 실망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그림3]에서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380명 중 81.5%가 공교육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6) 계층 혹은 계급class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유권자의 정치사회인식과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측정 지표에 대한 논의로는 제프리 에반스(Geffery Evans 2000)를 참조할 것. 에반스는 계급 혹은 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객관적인 지표로서 ‘소득’과 ‘교육수준’을 꼽는다.

7)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과 “만족하는 편” 응답을 합한 값이며 “불만족” 응답은 “매우 불만족한다”와 “불만족하는 편” 응답을 합한 값이다.

취학연령에 있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응답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70.4%로 그 강도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취학단계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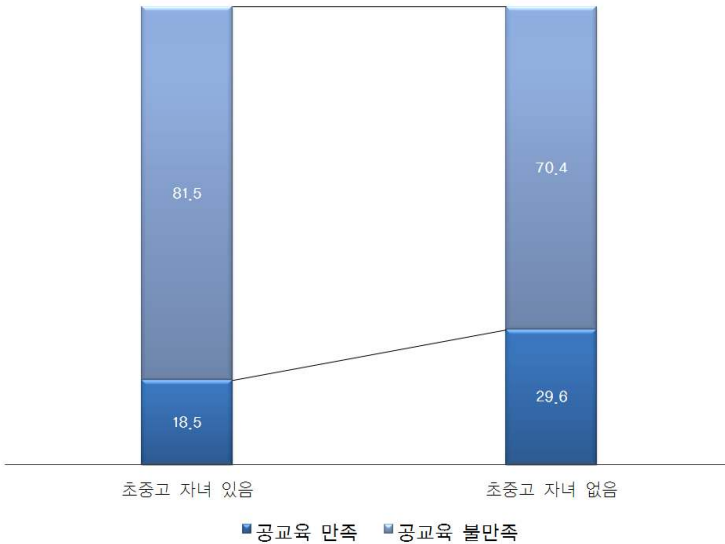
[표1]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 공교육 만족도 (%)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공교육만족도				Total	
	만족		불만족		모름/무응답 배제	
	빈도	%	빈도	%	빈도	%
소득	200만원 미만	29 (30.2)	67 (69.8)	96 (100.0)		
	200~400미만	114 (26.1)	322 (73.9)	436 (100.0)		
	400~600미만	47 (20.4)	183 (79.6)	230 (100.0)		
	600이상	22 (22.7)	75 (77.3)	97 (100.0)		
	무응답	37 (29.4)	89 (70.6)	127 (10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2 (25.5)	35 (74.5)	47 (100.0)		
	고졸	74 (25.8)	213 (74.2)	287 (100.0)		
	대재이상	163 (25.0)	488 (75.0)	651 (100.0)		
성별 **	남자	140 (28.7)	348 (71.3)	488 (100.0)		
	여자	109 (21.9)	388 (78.1)	497 (100.0)		
연령 ***	20대	110 (37.2)	186 (62.8)	295 (100.0)		
	30대	48 (19.1)	203 (80.9)	251 (100.0)		
	40대	49 (19.0)	209 (81.0)	258 (100.0)		
	50대이상	42 (23.2)	139 (76.8)	180 (100.0)		
직업 ***	농임어업	1 (50.0)	1 (50.0)	2 (100.0)		
	자영업	32 (21.1)	120 (78.9)	152 (100.0)		
	블루칼라	33 (30.6)	75 (69.4)	108 (100.0)		
	화이트칼라	56 (27.1)	151 (72.9)	207 (100.0)		
	주부	50 (17.7)	232 (82.3)	282 (100.0)		
	학생	58 (31.9)	124 (68.1)	182 (100.0)		
	무직/기타	18 (36.0)	32 (64.0)	50 (100.0)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자녀교육에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 층에서 공교육 불만이 더 크게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40대 층에서 자녀 교육 부담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20대에 비해 공교육 불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 직업 층에 비해 주부층이 상대적으로 공교육 불신도가 크다는 사실은 자녀교육의 책임과 개입 여부가 공교육 평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3] 취학단계 자녀 유무별 공교육 만족도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85)

공교육 실패 : 전인교육 위기 vs 입시 경쟁력 위기

기존 연구들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있어 공교육의 실패는 대체로 입시교육의 실패로 진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홍원 외 2005; 우천식 2004). 이 질문에 경험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가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만약 교육소비자들이 공교육 실패를 입시교육의 실패로 찾을 경우 자녀가 입시단계로 접어들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교육의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된다. 만약 공교육의 입시기관 역할에 대한 불신일 경우 주로 사교육은 입시교육 내용과 관련이 깊을 것이고 반대로 전인교육 차원의 인적자원 육성기능에 불신을 갖는 것이라면 사교육의 내용도 주로 전인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즉 입시시점에 가까운 자녀가 있을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미취학자녀 포함 취학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70.4%가 공교육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을 한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78.4%, 중학생 학부모의 83.1%, 고등학생 학부모의 83.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표2].

[표2] 자녀 취학단계별 공교육 만족도 (%)

자녀특성	공교육만족도				Total		
	만족		불만족		빈도	%	
	빈도	%	빈도	%			
초등학교	31	(21.5)	113	(78.5)	144	(100.0)	
자녀 학년 ***	중학교	16	(16.8)	79	(83.2)	95	(100.0)
	고등학교	13	(16.5)	66	(83.5)	79	(100.0)
	취학단계 전후 자녀 없음	179	(29.6)	426	(70.4)	605	(100.0)

주)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자녀의 사교육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표3]에서 전체 응답자를 보면 사교육의 이유로 50.1%가 수능대비를 꼽았고 28.8%가 내신성적 향상을 꼽았다. 교양/취미 개발 8.1%, 영어능력향상 7.0%, 해외 유학준비 목적은 2.6%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내신 성적(36.8%), 수능대비(36.1%)를 사교육의 주된 이유로 꼽았지만 중학교 자녀부터는 압도적으로 수능대비를 위한 사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54.2%가 수능대비를 사교육의 핵심 이유라고 답했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5.4%가 같은 대답을 했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사교육은 철저히 입시대비 즉 주로 수능대비를 중심으로 일부 내신 관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해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다수 국민들이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영역보다는 공교육에서 충족되기 힘든 입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전인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교양/취미 개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교육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그 반증인 셈이다.

[표3] 자녀 취학단계별 사교육 목적 (%)

	교양/취미 개발	내신 성적 향상	수능 대비	영어능력 향상	해외유학 준비	기타
전체 1002명	80 (8.1)	289 (28.8)	502 (50.0)	70 (7.0)	26 (2.6)	35 (3.5)
초등학교 144명	15 (10.2)	53 (36.8)	52 (36.1)	13 (9.0)	3 (2.1)	8 (5.6)
중학교 94명	5 (5.2)	28 (29.2)	52 (54.2)	4 (4.2)	3 (3.1)	4 (4.2)
고등학교 80명	2 (2.5)	23 (28.4)	53 (65.4)	1 (1.2)	1 (1.2)	1 (1.2)

주1. 카이제곱 검정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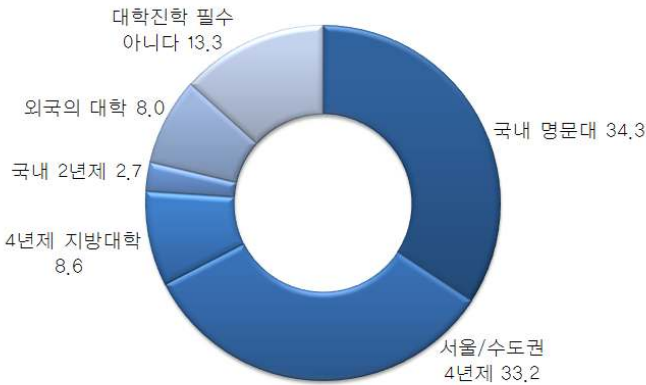
주2. 해당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의 수치는 비율

공교육 실패의 원인

학벌주의와 공교육 불신

공교육 불신에 미치는 학력 및 학벌주의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우선 응답자들 대상으로 자신의 자녀가 진학하기 바라는 학교수준에 대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살펴본다.

[그림4] 자녀 진학 희망대학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1,003)

조사결과 역시 자녀의 국내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응답층이 34.3%로 가장 많았고,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희망한 응답이 33.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4년제 지방대학을 희망한 응답자는 8.6%, 국내 2년제 대학 진학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역시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까지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러한

교육열이 2007년 기준으로 한국 고등학생의 83%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의 배경이 된다(뉴시스 2008/09/04). 한편, 외국의 대학에 유학했으면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나 아직 해외유학을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국민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학 진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자녀가 진학하기 바라는 학교수준이 높을수록 즉 자녀학벌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는 교육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및 학벌주의가 공교육 실패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녀가 대학서열구조 중 상위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거나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할수록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육에 대한 만족을 표시한 비율은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바라는 응답자 중에서 21.5%, 외국대학 진학을 바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17.9%에 불과했다.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진학을 바라는 학부모와 지방대 및 전문대 진학을 바라는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는 각각 26.7%와 38.1%로서 외국대학 혹은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벌 혹은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4] 자녀 진학 학교에 대한 기대별 공교육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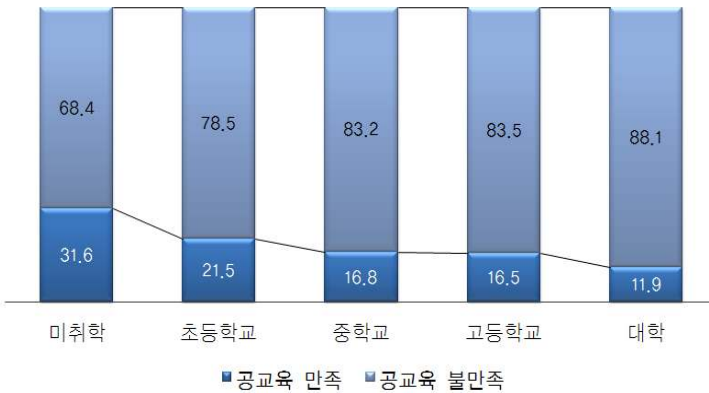
	공교육만족도				Total		
	만족		불만족		(모름/무응답제거)		
	빈도	%	빈도	%	빈도	%	
국내 명문대	72	(21.5)	263	(78.5)	335	(100.0)	
서울/수도권 4년제	87	(26.7)	239	(73.3)	326	(100.0)	
희망진 학대학	국내 4년제 지방	32	(38.1)	52	(61.9)	84	(100.0)
***	국내 2년제 대학	8	(32.0)	17	(68.0)	25	(100.0)
	외국의 대학	14	(17.9)	64	(82.1)	78	(100.0)
	꼭 갈 필요 없다	35	(26.9)	95	(73.1)	131	(100.0)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대학으로 변진 공교육 위기 : 명문대 프리미엄의 약화

기존 연구들과 논의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대학교육 이전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교육의 위기는 대학이전 입시단계의 교육에서 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림5] 자녀의 학교단계별 공교육 평가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85)

우선, [그림5]에서 주목할 결과는 중고생 학부모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점에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무려 88.1%가 한국 공교육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본 것처럼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현 교육체제에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미취학 단계일 때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68.4%였지만 초등학생 학부모는 78.5%, 중학생 학부모의 83.2%, 고등학생 학부모의 83.5%에 달했다.

입시가 끝난 대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가 최악이라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대학입시과정뿐 아니라 대학교육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단순히 대학입시교육의 부작용 정도로 환원하기보다는 대학 이후 취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대학교육의 질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교육 소비자들 사이에 기존의 ‘명문대 진학=사회적 성공’이라는 등식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공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대학위주의 교육제도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소위 명문대 프리미엄도 약화되고 있는 것도 교육 소비자들의 교육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입시를 통해 어렵게 대학을 진학해도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발표한 전국 363개 대학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총취업률은 67.3%이고 정규직 취업률은 49.2%에 불과했다. 대학졸업자 2명 중 1명만이 정규직장에 취업하는 셈이다. 그나마 군입대, 대학원 진학자 등을 졸업자에서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서 졸업자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학교 중 총취업률, 정규직취업률에서 상위 10개 대학을 뽑아 평균을 내보면 각각 74.7%와 63.2%에 그쳤다. 상위 10개 학교조차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된다. 대기 취업률 상위 10개 학교의 평균을 내봐도 29.6%에 불과했다([표5]).

상위 명문대와 그 외 대학 간 취업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취업한 직장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명문대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상위 10위권 대학에서조차 10명 중 4명은 취업에 실패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야 할 만큼 국내 노동취업시장의 문이 좁아진 상태라는 것은 과거의 명문대 프리미엄의 약화를 의미한다. 즉 취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대학졸업이 취업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국대학에 대한 선호가 늘었고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데에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국내취업환경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공을 보장해주던 국내명문대에 대한 학벌주의가 여전히 잔존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명문대 출신도 취업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일 뿐 과거와 같은 보증수표는 되지 못하고 있다.

[표5] 전국대학 및 취업항목별 상위 10개 대학 취업률 평균⁸⁾

학 교 명	취업률	정규직취업률	대기업취업률
각 취업률 상위10개 대 평균	74.7%	63.2%	29.6%
전국 363개 대학 평균	67.3%	49.2%	-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교육인적자원부·KEDI)

기존 학력서열구조의 변화 : 해외 학벌 부상

앞서 국민들이 자녀가 진학하기 바라는 학력기대 수준에서 여전히 국내 명문대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위 명문대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주목할 점들이 발견된다.

[표6]을 보면 우선, 가계소득별로 보면 월 4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에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400만원 미만의 층에서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명문대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400만원 이상 집단은 국내 명문대, 수도권 대학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에서는

8) 조사에서 상위 10개대는 1년 졸업생이 3,000명이 넘는 A그룹에 속한 큰 규모의 대학들 중에서 선정되었다. 전체 취업률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건국대, 인하대, 동의대, 경북대, 동아대 순이었고, 정규직 취업률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인하대, 경북대, 동의대, 부산대, 이화여대 순이었다. 여기에 서울대가 빠진 것이 이색적인데, 서울대 졸업생들의 경우 주로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비중이 큰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 취업률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인하대, 건국대, 경북대, 이화여대, 서울대, 영남대 순으로 10개 학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400-600만원 층의 10.7%, 600만원 이상 층에서 11.5%로 두 자리 수를 넘겼다. 200-400만원 미만 층에서는 자녀의 외국대학 진학 희망응답이 6.8%로 떨어지고, 200만원 미만 층에서는 3.7%로 급감한다.

한편 세대별로 보면 자녀의 학력기대 수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젊은 세대의 경우, 명문대 학벌주의에 대한 집착은 확실히 고연령층에 비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50대의 경우 자녀 진학 희망대학으로 국내명문대를 꼽은 응답자가 41.6%나 되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36.0%, 35.0%로 낮아진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바란다라는 응답은 27.8%로서 서울 및 수도권대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자 29.9%보다도 적었다. 대신 외국대학 진학 및 대학진학 불필요 응답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자녀의 희망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20대와 30대의 경우 “대학진학을 필수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19.6%, 16.5%로 40대 8.2%, 50대 이상 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문대 중심의 학력서열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20대의 경우 자녀의 진학 희망대학으로 외국대학을 꼽은 응답비율이 12.6%로서 50대 이상의 4.2%, 40대의 3.3%를 크게 앞지르고 30대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국내 명문대 출신의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외국대학 출신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수요가 커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젊은 세대일수록 외국대학 진학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응답의 배경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의 학력소지자인 경우 자녀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국내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대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학력자(대재 이상)인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가 국내 명문대를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또한 외국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응답층은 역시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10%였고, 고졸 학력층에서는 4.6%, 중졸 학력층에서는 1.3%에 그쳤다.

한편, 자녀의 취학단계가 높을수록 국내 명문대 진학에 대한 희망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취학 단계,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들 중 각각 40.0%, 42.0%가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바라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32.3%, 35.4%로 줄어든다. 대신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해외교육 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지만, 미취학 단계의 학부모들의 경우 10%, 초중학생 학부모들의 8% 가량은 해외 대학을 희망하고 있다. 즉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능력과 무관하게 명문대 혹은 해외진학을 바라고 있지만, 이미 상당부분 자녀의 학습능력이 판별이 된 고학년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녀 진학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리하면, 현재 명문대 학력주의를 주도하는 층은 고연령층, 고학력, 고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든 세대를 제외한 고학력, 고소득층은 동시에 해외대학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주의를 주도하는 이들 계층 중 일부는 이미 약화되는 명문대 프리미엄을 대체할 새로운 학력 혹은 학벌 경로로서 해외유학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젊은 세대의 경우 일부는 명문대 학력주의 대신 대학교육을 필수적으로 보지 않는 학력파괴적 발상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고소득, 고학력층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육기회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6] 성 · 소득 · 연령 · 교육수준별 · 자녀의 학교단계별 희망진학대학

		국내 명문대		서울/수도권 4년제		4년제 지방대 2년제 대학		외국의 대학		대학진학 필수 아님		Total (모름/무응답제거)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53	(30.7)	162	(32.5)	57	(11.4)	46	(9.2)	81	(16.2)	499	(100.0)
**	여자	191	(37.8)	171	(33.9)	56	(11.1)	34	(6.7)	53	(10.5)	505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26	(25.9)	32	(31.1)	21	(20.2)	4	(3.7)	19	(19.0)	102	(100.0)
	200~400미만	141	(32.1)	149	(33.7)	57	(12.9)	30	(6.8)	64	(14.6)	441	(100.0)
	400~600미만	93	(40.3)	72	(31.1)	21	(8.9)	25	(10.7)	21	(9.0)	231	(100.0)
	600이상	38	(39.2)	32	(33.3)	2	(2.0)	11	(11.5)	14	(14.0)	96	(100.0)
	무응답	46	(34.2)	49	(36.5)	13	(9.5)	10	(7.9)	16	(11.9)	133	(100.0)
연령	20대	84	(27.8)	90	(29.9)	31	(10.2)	38	(12.6)	59	(19.6)	302	(100.0)
	30대	92	(36.0)	73	(28.3)	24	(9.2)	26	(10.0)	42	(16.5)	257	(100.0)
	40대	92	(35.0)	106	(40.4)	34	(13.1)	9	(3.3)	22	(8.2)	262	(100.0)
	50대 이상	76	(41.6)	64	(35.1)	24	(13.1)	8	(4.2)	11	(5.9)	183	(10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6	(33.3)	15	(31.8)	12	(25.7)	1	(1.3)	4	(7.9)	48	(100.0)
***	고졸	80	(27.0)	115	(38.9)	38	(13.0)	14	(4.6)	48	(16.4)	295	(100.0)
***	대재이상	247	(37.5)	203	(30.8)	62	(9.4)	66	(10.0)	82	(12.4)	660	(100.0)
자녀	미취학단계	8	(40.0)	5	(25.0)	3	(15.0)	2	(10.0)	2	(10.0)	20	(100.0)
학교	초등학생	60	(42.0)	35	(24.5)	14	(9.8)	12	(8.4)	22	(15.4)	143	(100.0)
단계	중학생	31	(32.3)	45	(46.9)	9	(9.4)	8	(8.3)	3	(3.1)	96	(100.0)
***	고등학생	28	(35.4)	37	(46.8)	12	(15.2)	1	(1.3)	1	(1.3)	79	(100.0)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공교육 실패가 가져온 사회적 인식 변화: 평등주의적 교육관 및 사회적 상승이동 기대의 약화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기존 연구나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교육인식 변화를 경험적으로 재확인하거나 최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여러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공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발생한 변화가 교육 이슈 및 교육관련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본 연구팀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든 현 교육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교육이념 혹은 철학적 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공교육 제도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심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평등주의적 정책을 더 선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평등주의적 요소대신 경쟁요소를 더 강화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로 정책적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인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팀은 공교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social mobility)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가정한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 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사회화 과정이자 계층적으로 보면 중하층에 속한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신계층을 떠나 명문대 진학이 사회적 계층 상승의 통로로 이해되어 온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교육 불신과 평등주의적 교육관 약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주의는 역설적이게도 고교 평준화 정책과 같은 기존의 평등주의적 공교육제도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김정근 2004).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벌경쟁을 통한 자녀의 사회적 신분상승을 꿈꾸는 중하층의 교육 소비자들은 평등주의적 공교육제도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고교등급제나 특목고 논란과정에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충분히 사교육경쟁에 뛰어들기 힘든 중하층 다수 국민들에게는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막은 요인으로 비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현재 한국 공교육제도가 평준화에 기반한 제도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원래의 제도적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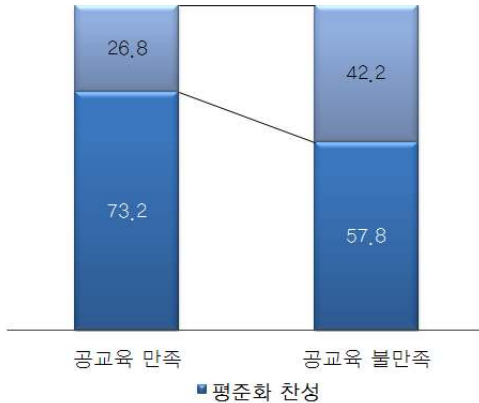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 공교육제도가 자녀의 입시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의 평등성을 현재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반대로 평등주의적 요소 대신 현실적인 입시경쟁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본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교육인식이 후자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6]을 보면 아직은 전체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 여부에 따라 입장 차이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즉 현행 공교육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평준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73.2%로 반대하는 여론 26.8%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 불만이 큰 사람들은 역시 찬성하는 여론이 57.8%로 다수를 점하고는 있지만, 평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42.2%로 공교육에 만족하는 사람들에 비해 15.4% 포인트나 증가한다. 현재 공교육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할수록 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 국민, 한국의 교육소비자들이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문화적 기반이 되었던 평등주의적 경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현 공교육기관의 경쟁력 약화가 상당부분 평등주의적 요소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효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사회이동 경로로서 계속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학력 획

득을 위한 입시경쟁력에서는 사교육에 밀리는 상황이 전개될수록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공교육이 이념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요소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그림6] 공교육 만족여부에 따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태도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66)

공교육 위기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에 대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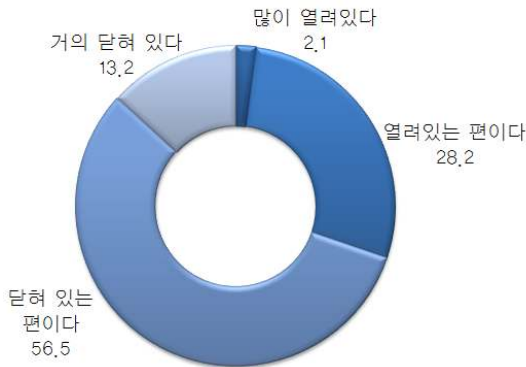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앞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 소비자들은 학벌의 획득이 사회적 이동의 거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하면서 교육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신분상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내 자식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적 상승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기대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상승 기회를 만드는 장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교육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사회경제적인 활력과 함께 시민

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과 책임의식(commitment)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회적 이동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충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도 한다. 교육, 특히 공교육은 사회적 이동을 매개(mediating)하는 핵심변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Blandel et al 2006; Miliband 2003; Nunn et al. 2007). 결국 (공)교육의 실패는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이동 전망과 기대를 약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림7]을 보면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자를 제외한 974명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는 응답은 2.1%, 열려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28.2%로 총 30.3%만이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닫혀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56.5%, 거의 닫혀 있다는 13.2%로 69.7%는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림7] 한국 사회 계층이동기회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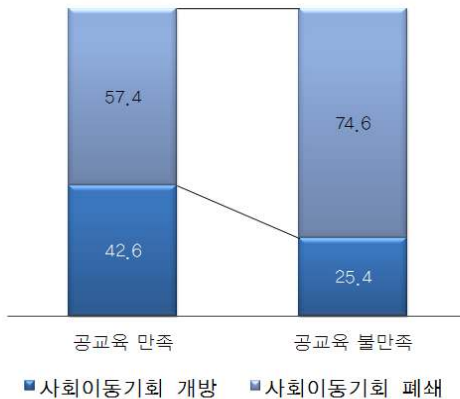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74)

[그림8]에서 공교육에 대한 태도와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교차해보면 역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는 응답층에서는 한국사회 계층이동 기회가 열려있다는 응답이 42.6%, 닫혀있다는 응답이 57.4%였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층에서는 한국사회 계층이동 기회가 열려있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하다. 반면 계층이동기회에 닫혀있다는 응답은 74.6%였다.

우리사회에서 공교육은 사회계층의 상승을 도모하는 유력한 통로로 작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승이동의 수단으로서의 학력경쟁이 과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해 원하는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소위 명문대를 진학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지위를 갖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평가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사회적 계층이동에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심화될수록 기존 공교육 제도의 틀을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적 경쟁의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8] 공교육 만족 여부에 따른 한국 사회 계층이동기회 평가(%)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954)

교육 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 조기유학

조기유학은 상류층을 넘어 중산층으로 확산되어 왔고, 조기유학의 시점도 점점 더 저연령 미취학 아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각종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조기유학 문제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조기유학을 ‘교육 엑소더스’, ‘광풍’ 등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조기유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조기유학’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대학입시용이거나 국내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의 수동적인 탈출구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기유학 옵션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후 사회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유학은 공교육에 대한 달라진 교육 수요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으로까지 확산된 교육 불신과 한국 사회에 통용되어오던 ‘명문대 진학=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공식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는 과정에서 찾아낸 합리적 경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교육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기유학은 대학입시 차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영어’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대학졸업생의 채용에 있어서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유학과 해외연수 등은 채용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임천순·양병무, 2006)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기유학은 해외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유력한 경로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과 기존 명문대 프리미엄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노동취업 시장에서 세계화 심화의 결과로서 외국어 능력과 국제감각을 주요한 경쟁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나 국제인적자원의 이동 심화 등의 현상—과 해외 학력 취득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조기유학이라는 교육 수요는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이 장에서는 조기유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첫째,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하면서 조기유학이라는 선택이 얼마만큼 교육 소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조기유학은 입시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소통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취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직접적으로는 영어능력 습득에 대한 기대와 취업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조기유학 선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셋째, 상당기간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기유학 실태 : 조기유학의 확산 추세

늘어나는 조기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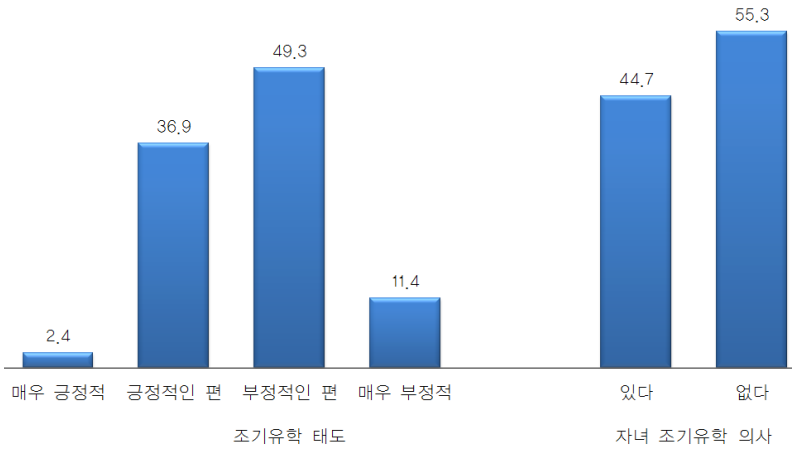
조기유학이 등장한 초기에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부유층 부모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실제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유학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조기유학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기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명문대 진학에 ‘목숨 건’ 비정한 학벌만능주의자 쪽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공교육 위기의 구조로부터 자기 자식만이라도 해방시키겠다는 나홀로 탈출자라는 비판도 있었다. 또는 국부유출론자라는 비판도 있었다.⁹⁾

실제로 김수매리의 연구에서 강남지역 이외 지역의 학부모들과 달리 강남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에 찬성하는 부모(56%)가 반대하는 부모(44%)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매리, 2006). 이번 여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 39.3%(매우 긍정적 2.4%, 긍정적인 편 36.9%)였고, 부정적인 응답이 60.6%(부정적인 편 49.3%, 매우 부정적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1%였다.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그림9].

9) 조기유학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광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이민열풍 이어 조기유학 광풍” (한국일보 2003/10/26), “21세기 한국형 이산가족들” (세계일보 2005/10/09) 등 참조

[그림9]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및 조기유학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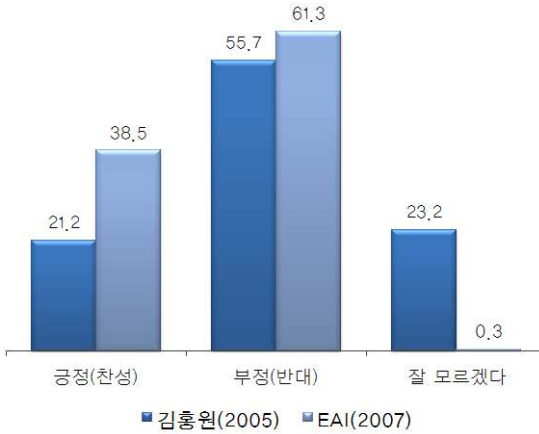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각각 n=1,007)

그러나 여건이 되면 보내겠다는 조기유학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44.7%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에 조기유학 추세가 강화되면서 조기유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그 흐름에 편승여론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편승여론은 자기 자녀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홍원 외(2005)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층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층이 23.2%, 찬성여론은 21.2%, 반대여론은 55.7%였다. 비교를 위해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385명만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8.5%,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61.3%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0.3%였다([그림10] 참조).

[그림10] 학부모집단의 조기유학에 대한 상대적 태도 변화(%)



* 두 자료 모두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김홍원 n=556, EAI n=385)

조기유학 여론, 누가 주도하나

이 절에서는 조기유학의 주도계층이 누구인지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살펴보자. [표6]에서 우선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조기유학에 부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에 긍정적이다.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200-400만원 수준의 중간소득층에서는 각각 36.3%, 35.1%였지만 400만원-600만원의 중상층,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찬성여론이 각각 41.3%, 48.0%로 그 이하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 보면 현재 자녀가 공교육제도에 편입되어 있거나 조만간 혹은 조만간 편입될 젊은 세대가 조기유학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20대에서 조기유학에 긍정적 입장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49.5%, 30대에서는 42.4%였다. 반면 40대에서는 33.7%, 50대 이상에서는 26.2%로 크게 급감한다. 젊은 세대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크다는 것은 이들이 학부모의 중심세대로 들어설 경우 조기유학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더라도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비율이 중졸 이하 학력 층에서는 31.3%, 고졸 층에선 32.1%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재 이상의 학력 층에서는 43.4%로 긍정적 인식이 높다. 다만 직업별로는 예상과 달리 학생층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층에서는 절반 이상인 53.2%가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화이트칼라 전문직 층에서 39.0%로 평균 수준이었고 나머지 층에서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30% 초중반에 고르게 포진하고 있다. 즉 부모의 직종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표6]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				총합	
		긍정적		부정적		(모름/결측제외)	
		빈도	(%)	빈도	(%)	빈도	(%)
소득 **	200만원 미만	37	(36.3)	65	(63.7)	102	(100.0)
	200~400미만	156	(35.1)	289	(64.9)	445	(100.0)
	400~600미만	95	(41.3)	135	(58.7)	231	(100.0)
	600이상	47	(48.0)	51	(52.0)	97	(100.0)
	무응답	61	(46.2)	71	(53.8)	132	(100.0)
연령별 ***	20대	150	(49.5)	153	(50.5)	303	(100.0)
	30대	109	(42.4)	148	(57.6)	257	(100.0)
	40대	89	(33.7)	175	(66.3)	264	(100.0)
	50대 이상	48	(26.2)	135	(73.8)	18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5	(31.3)	33	(68.8)	48	(100.0)
***	고졸	95	(32.1)	201	(67.9)	296	(100.0)
	대재이상	287	(43.4)	375	(56.6)	662	(100.0)
	직업별	농임어업	1	(50.0)	1	(50.0)	2
***	자영업	52	(34.0)	101	(66.0)	153	(100.0)
	블루칼라	39	(34.2)	75	(65.8)	114	(100.0)
	화이트칼라	83	(39.0)	130	(61.0)	213	(100.0)
	주부	104	(36.1)	184	(63.9)	287	(100.0)
	학생	99	(53.2)	87	(46.8)	186	(100.0)
	무직/기타	17	(34.7)	32	(65.3)	50	(100.0)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이러한 응답패턴은 [표7]에서 여건이 되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겠냐는 조기유학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조기유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직업별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기유학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층(58.6%)과 화이트칼라 전문직(46.5%)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론을 주도하는 고학력층, 고소득층이나 미래 학부모 층으로 대거 유입될 젊은 층이었다. 젊은층

[표7]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 조기유학에 대한 의향(%)

		조기유학 의향				총합	
		있다		없다		(모름/결측제외)	
		빈도	(%)	빈도	(%)	빈도	(%)
소득별	200만원 미만	34	(33.3)	68	(66.7)	102	(100.0)
	*** 200~400미만	186	(41.8)	259	(58.2)	445	(100.0)
	400~600미만	108	(46.8)	123	(53.2)	231	(100.0)
	600이상	59	(60.8)	38	(39.2)	97	(100.0)
	무응답	63	(47.7)	69	(52.3)	132	(100.0)
연령별	20대	162	(53.6)	140	(46.4)	302	(100.0)
	*** 30대	121	(46.9)	137	(53.1)	258	(100.0)
	40대	103	(39.0)	161	(61.0)	264	(100.0)
	50대 이상	64	(35.2)	118	(64.8)	183	(100.0)
교육	중졸이하	16	(33.3)	32	(66.7)	48	(100.0)
수준별	고졸	108	(36.5)	188	(63.5)	296	(100.0)
	*** 대재이상	326	(49.2)	336	(50.8)	662	(100.0)
직업별	농임어업	1	(50.0)	1	(50.0)	2	(100.0)
	*** 자영업	63	(41.2)	90	(58.8)	153	(100.0)
	블루칼라	39	(34.2)	75	(65.8)	114	(100.0)
	화이트칼라	99	(46.5)	114	(53.5)	213	(100.0)
	주부	115	(39.9)	173	(60.1)	287	(100.0)
	학생	109	(58.6)	77	(41.4)	186	(100.0)
	무직/기타	24	(49.0)	25	(51.0)	50	(100.0)

** : 카이제곱 검정 $p < 0.05$, ***: 카이제곱 검정 $p < 0.01$

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머지 집단에서도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는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조기유학이 이산화될 초기 단계에서 조기유학을 부유층의 일탈행동으로 가볍게 해석했던 경향을 고려하면 적은 규모로 치부하기 힘들다.¹⁰⁾

왜 조기유학을 선택하나?

그렇다면 조기유학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교육 소비자들은 조기유학을 새로운 교육 경로 중의 하나로 택하게 되는 것일까? 기존 연구들의 주장처럼 본 조사 결과 역시 조기유학이라는 교육수요가 발생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영어능력의 취득에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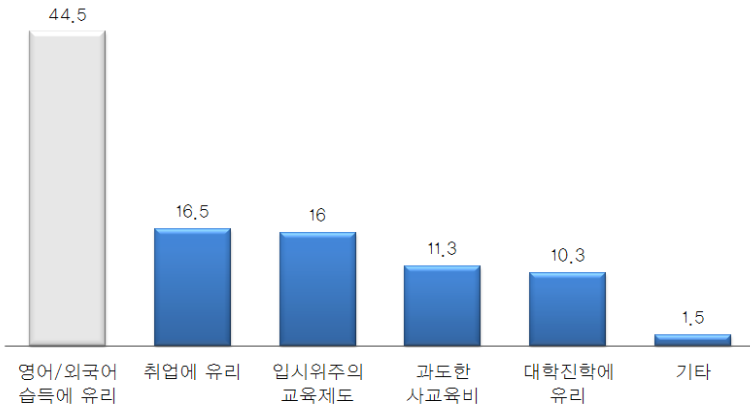
영어교육과 조기유학

조기유학의 증가를 모두 공교육 실패 때문으로 환원하기 보다는 조기유학을 강화시키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기유학의 최대 목표는 영어습득에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미나 2001; 김홍종 외 2005).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국가, 기업, 개인 차원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 능력은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업, 정부, 학교 입시, 대학, 학계 등 전 사회의 소위 좋은 직장에서 ‘영어 능력’이 개인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영어 능력’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단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한다(이병민 2006). 입시나 취직은 물론 승진 등 여러

10) 실제로 2005년 동아닷컴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도 “한국의 조기유학 붐을 부유층의 일탈행동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인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김홍원 외 2005에서 재인용).

관문에서 영어 능력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인식이 다. 특히 취업 및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은 과거처럼 시험과목에서의 높은 영어 점수 대신 실질적인 영어 소통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영어 어학연수 붐이 어린 청소년, 유아의 조기유학 ‘열풍’으로 확산되었다(한국일보 2001/10/21). 기업에서 해외연수나 유학의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임천순·양병무, 2006).

[그림11] 조기유학의 목적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1,006)

[그림11]에서 실제로 44.5%의 응답자들은 조기유학의 주된 목적으로 영어 및 외국어능력 습득을 꼽았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16.5%,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부터 탈피하려는 목적은 16.0%였다.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은 11.3%,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라는 답이 10.3%였다.

교육 소비자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영어수요에 비해 이에 부합하는 영어교육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림12]에서 영어수요 확

대에 따른 영어교육 공급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3.3%가 ‘보다 다양한 영어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꼽았다. “학교 영어수업을 강화해서 영어교육의 공급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37.0%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해외어학연수’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6.7%, ‘국내 사설 영어학원을 통해서’는 3.1%에 그쳤다.

[그림12] 영어교육 공급확대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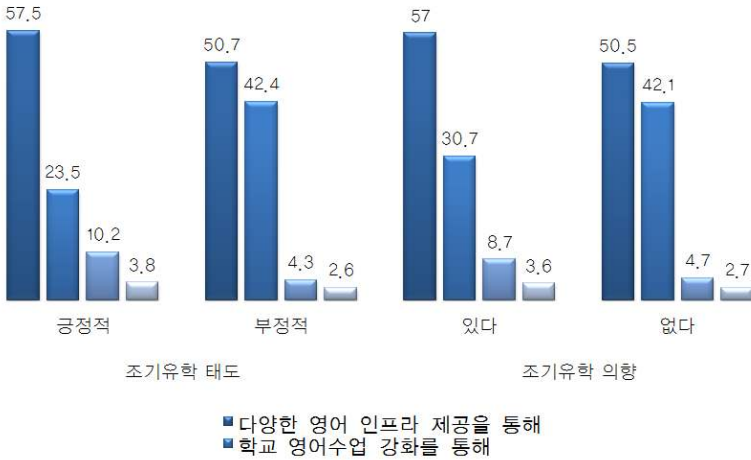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1,000)

영어교육 공급확대 방안을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나 의향별로 살펴보면 기존 영어교육 공급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들이 학교 영어교육 방법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학교 영어교육의 개선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선호하는 영어교육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교차분석한 결과,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부정적인 집단에 비해 학교 영어수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훨씬 부정적이다.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28.5%,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42.4%였다. 반면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다양한 영어 인프라의 확충’에 대해 57.5%, ‘해외 어학연수 방안’에 대해서는 10.2%였다. 조기유학에 부정적인 집단에서 각각 50.7%, 4.3%에 그친 것과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그림13].

[그림13]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의향과 영어교육 공급방안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각각 n=999)

조기유학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조기유학 의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 모두에서 ‘다양한 영어 인프라 제공을 통해’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영어수업 강화를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기유학 의향이 없는 집단이 42.1%, 조기유학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는 30.7%에 그쳤다. 반면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기유학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4.3%에 그쳤지만 조기유학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는 8.7%로 두 배에 달했다.

한편, 자녀가 국외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

[표9] 자녀 학력 기대수준과 영어교육 공급방안 (%)

	영어교육 공급방법				계	
	학교 영어수업 강화를 통해	다양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국내 사설 영어학원을 통해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빈도	%
국내 명문대	37.5	56.6	0.9	5	341	100
수도권 4년제	38.9	50.6	5.1	5.4	332	100
4년제 지방대 /2년제	35.7	48.2	5.4	10.7	112	100
외국의 대학	35	50	2.5	12.5	80	100
대학진학 필수 아님	31.8	58.3	2.3	7.6	132	100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각 n=997), ** : 카이제곱 검정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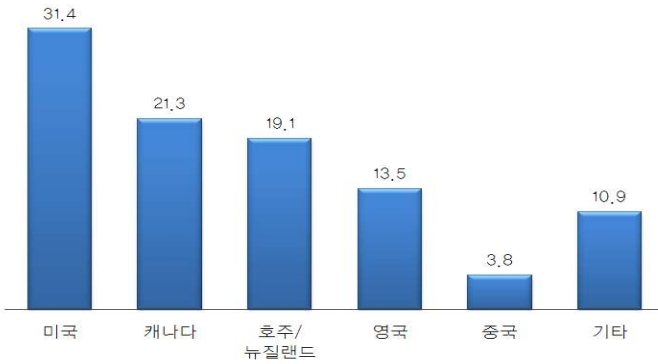
조기유학 보내고 싶은 나라, 보내는 나라

조기유학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영어습득에 있다는 사실은 조기유학을 보내길 바라는 선호국가나 실재가 가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자녀의 유학 최적지로 선호하는 나라는 본 조사에서 미국(31.4%) > 캐나다(21.3%) > 호주/뉴질랜드(19.1%) > 영국(13.5%) > 중국(3.8%)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상대로 주로 영미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최근의 한 선행 조사연구동 나타난바 있다(Ihm et al., 2007).

[그림16]에서 조기유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 2005년 통계를 보면 미국 (34.6%) > 중국(18.0%) > 캐나다(12.6%) > 동남아(11.4%) > 호주/뉴질랜드 (8.8%)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통계에서는 미국이 31.9%, 중국은 15.8%로 다소 줄었지만 동남아 유학생이 14.6%, 캐나다 유학생이 13.5%, 호주/뉴질랜드는 9.4%로 다소 늘었다. 여전히 미국으로의 유학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학경비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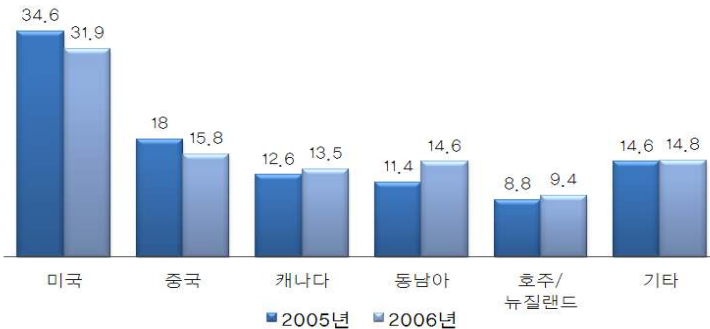
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남아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로 지리적 인접성과 비용의 이점을 고려하여 조기유학지로 선택하고 있다(중앙일보 2007/10/8).

[그림14] 가장 선호하는 조기유학 국가(%)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각각 n=999)

[그림15] 조기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 2005-2006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중국의 경우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조기유학 선택지로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한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어의 중요성과 수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 몰입하는 이유: 계층상승 기대·해외진학·취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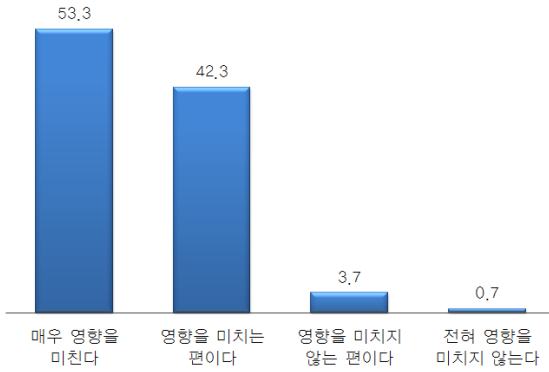
어린 자녀를 외국에 보내면서까지 영어를 배우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대학입시가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는 내신이나 입시에서의 고득점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와 국제 감각을 체득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한국의 교육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의 목표와 결합하면서 조기유학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이미나 2001). 한국 사회에서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더 좋은 외국의 교육환경 등도 조기유학을 강화시키는 배출요인임에 틀림없다(최양숙 2004). 결국 조기유학은 해외 대학 진학, 국내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영어능력의 배양은 국내외 진학, 취업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 계층상승 기회를 키우는데 관련이 되는 요인이며 조기유학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영어가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번 연구에서도 잘 보여준다. 본 여론조사에서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53.3%,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는 응답이 42.3%로 역시 영어가 취업과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95.6%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가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은 물론 직장에서도 중요한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얼마나 영어가 활용되고 영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강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실제 부서별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영어가 필요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전체

를 일반화해서 지나치게 영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생활에서 영어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부문에서 필요한지에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16] 영어실력이 취업이나 승진에 미치는 영향(%)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각각 n=1,006)

새로운 성공공식 : 해외유학을 위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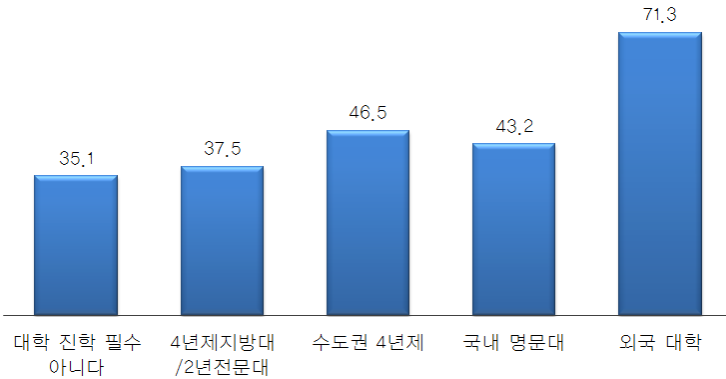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기유학의 증가는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력 개발, 입시 경쟁력,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조기유학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유학을 위한 유력한 경로로 인식되고 있었다. 최근 들어 국내 명문대 프리미엄이나 국내대학 진학을 통해 사회적 계층상승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고소득층, 고학력층,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조기유학을 나가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가 외국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중에서는 무려 71.3%가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

다. 해외유학에 조기유학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자녀의 학력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명문대 진학을 원할 경우 조기유학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명문대나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경우 해외유학을 바라는 학부모 층에 크게 못 미치는 43.2%, 46.5%만이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방대나 전문대 진학을 기대하거나 대학진학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는 응답자들의 경우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40%에 못 미치는 37.5%, 35.1%에 그쳤다.

[그림17] 자녀 희망 진학 학교와 조기유학 의향: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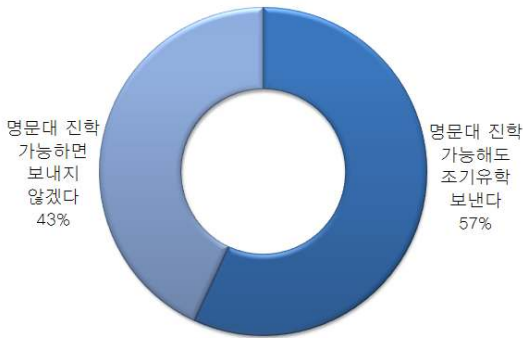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1,003)

반대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국내 명문대 진학만을 위해 조기유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조기유학 의향을 밝힌 45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한국에서 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이 가능해도 조기유학을 보내겠냐?”는 질문에 대해 무려 56.9%가 그래도 보내겠다고 답했고, 43.1%는 보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즉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는 사람 중 열 명 중

근 여섯 명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명문대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조기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측처럼 외국대학 진학이 차츰 기존의 명문대 프리미엄을 대체해갈 경우 조기유학의 규모는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기유학이 국내 입시 차원이나 공교육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으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시장에서 ‘명문대 진학 = 사회적 계층상승’ 공식이 약화되고 최근에는 8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로 인해 국내대학 진학이 줄 수 있는 경쟁력의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육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새로운 사회적 계층상승 경로를 찾아 나서게 만들었고 결국 조기유학은 국내 명문대 진학수준을 뛰어넘어 해외유학까지 고려하는 차원에서 유력하게 고려되는 경로가 되었다.

[그림18] 국내 명문대 진학 여부와 조기유학 보낼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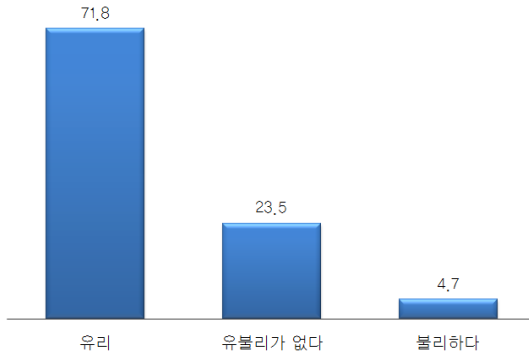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조기유학 의향을 밝힌 응답자 n=450)

조기유학, 취업경쟁력 강화수단

이상에서 살펴보면 조기유학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해외유학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유력한 경로임과 새로운 성공 등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학벌(해외 대학진학) 획득의 유력한 통로인 셈이다. 동시에 조기유학은 그 자체로 국내 취업시장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기유학이 장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물어본 결과에 대해 무려 71.7%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불리하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다는 응답은 23.6% 였다.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든 부정적인 인식을 갖든 대다수 교육 소비자의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조기유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취업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조기유학을 선택해야 할 압력은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림19] 조기유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



*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n=1,003)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명문대 진학 = 사회적 성공’이라는 계층 상승의 도식이 현실에서 깨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공교육 실패는 결국 초, 중, 고등학교

교에서의 교육이 교육의 최종 목표인 ‘대학입시 경쟁력’을 키워주라는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¹¹⁾ 즉 대학 진학이라는 공교육의 목표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소비자들은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경로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본 연구팀은 그 노력의 결과로 찾은 경로가 ‘조기유학’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했다. 조기유학은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대학입시용에 불과하거나 국내 교육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때 선택하는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내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명문대 진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상승이동의 프리미엄을 이제 해외 교육시장에서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확대는 교육 선택의 기회를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전에 일부 특권층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유학이나 조기유학이라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다 조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국내 교육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도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서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노동시장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은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적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기유학은 최소한 영어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이후 해외진학, 취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며 한국 교육에서 나타나는 사교육비의 문제와 공교육 실패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조기유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와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학벌, 학력 이외의 경로를 통한 사회적 이동기회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교육소비자들의 조기유학에 대한 선택은 전략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 물론 전교조나 일부 시민단체, 일부 국민들은 공교육 실패를 역으로 공교육이 입시학원으로 전략하면서 교육본연의 임무를 등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자녀의 대학진학 경쟁력을 공교육에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교육 실패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논의 요약 및 제언

공교육 및 조기유학과 관련된 본 연구진의 조사 결과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연구 결과, 한국교육 전반(조기유학 현상 포함)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아울러 위기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한국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교육에 대해 24.7%만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무려 73%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자녀의 취학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실제 취학자녀를 둔 30대, 40대의 부모들과 주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요의 핵심주체인 30대, 40대 학부모들, 특히 자녀교육의 부담을 직접 부담하는 주부들의 경우 17.5%만이 공교육에 만족하고 있다는 낮은 만족도는 현재 입시 위주의 평가지향적인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여실 없이 드러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특정 소수계층에만 국한된 사회병리적 관점에서 조명된 ‘조기유학’ 현상을 ‘국가간 학습이동’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교육 소비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한 전략적 소비형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과 투자가 일정부분 전략적 소비의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세대별, 지역별, 소득별, 부모학력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국내 명문대 중심의 서열구조는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시장 역시도 분절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취학기 자녀(특히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단기성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조기유학이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조기유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하는 조기유학과는 동기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믿음과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주기 위한 동기가 있다.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초등학생들의 조기유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유학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제도권 교육의 불신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 ‘경쟁력 있는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기유학제도는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개인차원의 단기성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적 안목, 소양, 그리고 규범에 익숙한 인적자원 육성과 축적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영어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사회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켜 사회적 활력과 통합을 저해하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 직접적으로는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봉쇄되면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학교 영어교육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입시교육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어사용 환경에서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현재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영어 수준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영어교육 정책에 있어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향후 입시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은 물론, 교육수요자의 요구측면에서의 영어교육 정책의 재검토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적 자원이 늘어나듯이 반대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인적 자원의 증가 속도도 빨라진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시대에 조기유학을 국부 유출로 규범적 차원에서 경원시할 경우 안정적인 취업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능력을 개발하려는 개인적 성취동기조차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과 연령, 개인적 성향과 능력에 따라 교육 수요가 다원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다원화된 교육 수요

에 부합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관련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채. 2007. “명문대여 정말 3불 타인가.” 《한겨레신문》 (4/20).
- 강준만. 1996.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강지연. 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근. 2004.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괴외수요 창출요인”. 우천식(2004)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훈. 2002.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더북.
- 김동훈. 2005.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 김부태. 1995.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성숙. 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수매리. 2006. “조기유학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한길사.
- 김양희·장온정. 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용학. 2003.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 외 (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 김철훈. 2001. 《한국 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문음사.
- 김태수. 2003. 《학벌,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굴레》 서원.
- 김홍원.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제26차 KEDI 교육 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장명림·김주후. 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회. 2004.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교육 새판짜기: 공공성에 입각한 민중진영의 공교육 개편방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안재오. 2003. 《교육공화국: 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얼과 알.
- 엄기영. 2007.9.26. “초중고 조기유학 3만명 육박”. 〈국민일보〉.
- 엄명용. 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오육환. 2001. 《학교교육과 불평등: 교육사회학 논문묶음》 교육과학사.
- 우천식 편.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윤혜준. 2005.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민. 2006. “ET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 교육》 10(2). 107-129.
- 이명민. 2003. “영어교육, 어떤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할 것인가?” 《안과 밖》 21, 281-298.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집문당.
- 임천순 외. 1992. 《국비유학연구》 교육부.
- 임천순. 1999. “국비유학생정책의 개선과 용자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 임천순·양병무. 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채용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0.30.
- 조명덕. 2000. “한국 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계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대학논문집 22, 173-198.
- 조삼섭·심성욱·신일기·이지현. 2006.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6-공모-9, 교육인적자원부.
- 조기숙.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프레시안》 (3.22).
- 조 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

- 레 연구”. 《경제화 사회》 64, 148-171.
- 조전혁. 2007. “비효율과 불의의 교육 펼쳐내야.” 《데일리안》 (9/17).
- 정진상. 2004.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서》 책세상.
- 최양숙. 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양숙. 2006. “기러기가족, 기러기아빠의 실상”. 교육정책포럼 98, 한국교육개발원. 10-13.

신문

- 세계일보(05/10/09), 조선일보 사설(07/03/23), 중앙일보 사설(07/03/23), 한겨레 신문 사설(07/03/23), 한국일보(03/10/26) 등 .

- Acemoglu, Daron. 1999. "Changes in Un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An Alternative Theory and Some Evi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5). 1259-1278.
- Blanden, Jo, Paul Gregg, and L. Macmillan. 2006. "Accounting for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Non-Cognitive Skills, Ability and Education." Center for the Economics of Education,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Burtless, Gary. 2007. "Globalization and Income Polarization in Rich Countries." *Economic Policy* 5. The Brookings Institution.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John Wiley and Sons.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Pearson Education.
- Ihm, Chon Sun. 2002. Skills and Competence in Leading Industries, World Bank, unpublished contract paper.
- Ihm, Chon Sun, Jang-ik Lee, Jeong-yoon Choi, and Anil Shukla. 2007. "Political Economy of Transnational Student Mobility." A World Bank/GDN Report,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Iverson, Torben and Thomas R. Cusack. 2000. "The Causes of Welfare State Expansion: Deindustrialization or Globalization?" *World Politics* 52. 313-349.
- Kayser, Mark A. 2007. "How Domestic Is Domestic Politics?: Globalization and Elec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341-62
- Krosnick, J.A. 1988. "The Role of Attitude Importance in Social Evaluation: A Study of Policy Preferences, Presidential Candidate Evaluations, and Vo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96-210.
- Miliband, D. 2003. "Opportunity for All: Targeting Disadvantage through Personalised Learning," *New Economy* 10:4.
- Nunn, Alex, Steve Johnson, Surya Monro, Tim Bickerstaffe and Sarah Kelsey. 2007. "Factors Influencing Social Mobility." *Research Report 450 for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of UK*. Corporate Document Services.

